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

2018. 02-02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국정지표-기획조사-현안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심층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민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한국에서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

요약문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쟁 이후 산업화, 민주화라는 거시적 국가 과제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2000년 대 이후, 정의의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의제로 부상해왔다.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작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공정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의롭고 공정한 한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한국리서치 2월 조사의 기획 주제를 공정성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한국리서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발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1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노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 선호, 한국의 근태 중시/야근 문화의 뿌리

-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였다.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응답은 전 계층 및 사회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능력이나 성과 보다 근무태도와 같은 노력 요인에 대한 보상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다음 각 기준에 대해 보수의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차이를 크게 두어야 한다”는 응답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근무태도(43%) > 능력(23%) > 업무 성과(22%) > 근속연수(1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나 가정형편, 부양가족 수는 임금격차를 둘 요인이 아니라는 응답이 69%로 높았다. “학력”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need)에 의한 분배”는 한국사회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차등은 경쟁을 전제로 한다. 경쟁의 효율성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동시에 경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79%가 동의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서 경쟁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62%나 되었다.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4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대에서는 58%로 높게 나타나 경쟁의 부담감이 특정세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

요약문

- 노력에 비례한 차등분배를 선호하고 경쟁의 폐해 못지 않게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는 태도는 한국에서 보편복지나 기본소득제 같은 정책보다는 선별복지나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장려 세제(EITC)’에 대한 선호가 더 큰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의 자구노력과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 정책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다. 나아가 기업이나 조직에서 소위 “근태”가 인사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야근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02

한국사회의 불공정 실태:

법 앞의 평등, 기회 균등, 계층상승 불신, 성공에 대한 이중잣대 팽배

- 공정한 차등 분배는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능하다. 공정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경쟁의 기회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불신이 확인된다.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입사나 취업의 기회가 소위 “가진 자”에 집중되고, 그 결과 소득 및 자산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이나 연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4%, 소득분배나 취업기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의견은 71%였다. 승진/진급 기회에 대해서도 65%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의 기회는 전혀 없다는 의견이 73%였고, 응답자의 3분의 1은 본인이 본인 세대의 평균적인 삶에 비해 실패했다는 열패감을 피력하고 있다.
- 불공정 인식과 강한 열패감 이면에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 스스로 성공했다는 응답자는 자수성가의 결과로 이해하지만, 스스로 실패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한국사회에서 성공은 배경과 연줄의 힘에 의한 불공정한 승리로 보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이중 잣대는 신뢰자본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

요약문

03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경쟁 제도와 징병제 개혁, 보편복지 견제심리, 우대제는 딜레마

- 우선,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연줄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불공정한 경쟁 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사립고사를 부활시키라는 요구가 72%, 특목고는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과반을 넘었다. 부모의 재력을 보상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다수였다.
-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지만, 실제 군복무는 배경 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해되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 채용 시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72%가 찬성하여 군복무에 따른 희생에 대해 보상하라는 여론이 다수다. 복무 형식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41%에 불과했다. 근원적으로 향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56%가 찬성했다.
- 불공정 경쟁은 양극화의 심화로 귀결된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성장보다 분배정책을 우선하라는 여론과 함께 고소득층 중세에 압도적인 지지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자구노력이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복지에 대한 견제 심리도 확인된다.
-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제(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가 다수를 점했다. 주로 저소득층, 고연령층, 비 수도권 거주자 집단에서 지지가 많았다. 그러나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2030세대)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집단(주로 서울 거주자)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강하다. 표면적으로 우대제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막상 본인의 문제로 인식할 때에는 우대제 실시에 주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이상의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정의에 대한 여론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보고서가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지도도를 만들어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1

들어가며

01

들어가며

공정성 조사연구팀:

정한울(한국리서치) · 이관후(서강대글로벌 정치사상연구소)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그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목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전쟁 이후 산업화, 민주화라는 거시적 국가 과제가 어느 정도 공교화된 2000년 대 이후, 정의의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무거운 제목을 내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작은 한국에서 유독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는 정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임기 초 낮은 지지율에 직면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론”을 내세우며 15%포인트 안팎의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다. 그러나 임기 중 측근들의 비리는 오히려 불공정 이미지를 가중시켰고, 최근 밝혀진 비리 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최순실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사건은 사회적으로 정의를 둘러싼 기쁨에 불을 끼얹었다. 평창올림픽에서는 정부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합의에 대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분노를 표출하며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러한 집단적인 분노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당국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언론은 이에 대해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기 힘든” 정의의 관점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이나 정의감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부정의에 대한 사적 포용성이 낮아진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7-80년대의 고속 성장기에는 타인의 부정의(不正義)가 각 개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삶이나 지위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납 가능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근 20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경쟁적 사회 구조는 개인적 차원에서 부정의에 대한 포용의 수준을 크게 낮추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정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이른 이후 장기간의 저성장과 극단적인 사회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계층 이동성의 극적인 하락이라는 구조적 측면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의의 문제가 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한국사회에서 정작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공정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고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한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개념 정의(definition)와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즉, 현재 한국인의 ‘정의감(sense of justice)’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 대안을 선호하는 지 파악해야 한다. 한국리서치 2월 정기조사의 기획 주제를 공정성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02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1)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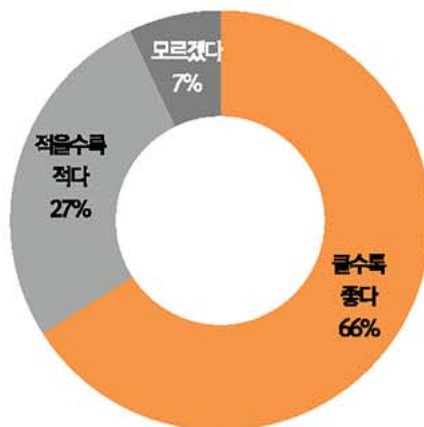
우리는 다양한 차원,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Justice)의 문제에 직면한다. 정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배분의 문제다.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모든 정치 공동체에서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정의의 핵심적 가치로 여겼다. 동양의 유교 전통에서 이것은 '균평(均平)의 원리'로서 정립되었다. 또한 근대 이후 모든 시민이 권리의 주체가 된 이래로는,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정한 분배에서 공정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1) 한국사회가 생각하는 평등의 의미 (2) 경쟁에 대한 시각과 공정한 보상의 기준 (3) 개인의 자유, 특히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공적 개입에 대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분배정의
산술적 평등보다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차이를 선호
세대별, 소득별 인식 차이
없어

능력, 노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차이 클수록 좋다, 66%

한국인이 생각하는 분배 정의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분배 과정에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기여와 성취(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분배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라는 의견(갑)에 가깝다는 의견(차등분배론)이 66%(매우 17%+대체로 49%)인 반면,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이는 적을수록 좋다”(을)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고르게 차등분배론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1]에서처럼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로 큰 편차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이념성향에서 진보, 보수 사이에 강도차이만 일부 있을 뿐 공히 능력/노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그림1] 능력/노력별 보수 차이



[표1] 세대, 소득, 이념성향별 보수 차이에 대한 인식

(N=1,000, %)

Base=전체	사례수 (명)	갑에 매우 가깝다	갑에 대체로 가깝다	을에 대체로 가깝다	을에 매우 가깝다	모르 겠다	계
연령							
19-29세	(175)	16	50	17	5	13	100
30-39세	(173)	20	49	17	4	9	100
40-49세	(203)	16	52	21	5	5	100
50-59세	(201)	16	46	23	8	8	100
60세이상	(248)	16	50	23	8	3	100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168)	12	43	24	8	12	100
200-300만원	(216)	21	48	19	7	5	100
300-400만원	(184)	14	57	18	3	8	100
400-500만원	(168)	17	53	15	7	7	100
500-600만원	(99)	19	41	23	8	8	100
600-700만원	(61)	15	46	29	6	3	100
700만원이상	(104)	19	51	23	4	3	100
이념성향							
진보(0-4)	(321)	15	54	21	6	4	100
중도(5)	(340)	15	47	21	7	10	100
보수(6-10)	(294)	22	47	21	6	4	100

02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2) 경쟁과 보상

경쟁 만능론도,
경쟁 망국론도 아닌
양면적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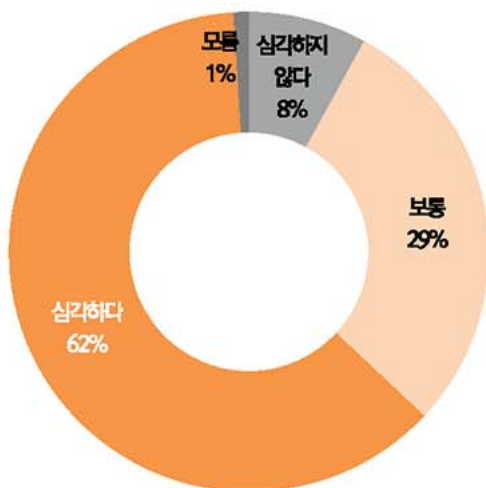
“경쟁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 79%, “경쟁의 부작용이 심각” 62%

기여도나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차등분배론은 공정한 경쟁과 그에 비례한 보상을 필요로 한다. 한편에서는 경쟁이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계이자 생산성의 촉진을 만들어내는 만능키로 이해되어 온 반면 다른 한편에서의 경쟁은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인간의 삶을 피폐화하는 망국의 근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경쟁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사회는 경쟁의 생산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동시에 우려하는 양면적인 태도가 확인된다.

우선 “한국에서 경쟁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62%나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79%가 동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4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대에서는 58%가 경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답해 다른 세대에 비해 경쟁의 부작용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경쟁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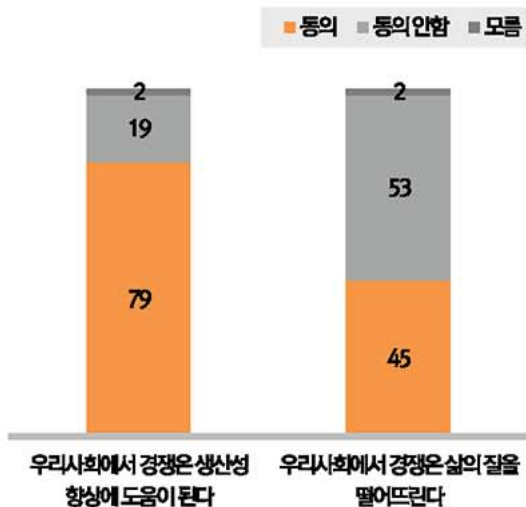
[그림2] 경쟁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

(N=1,000, %)



[그림3] 경쟁의 영향에 대한 인식

(N=1,000, %)



주1) 세대별로 경쟁에 의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대가 58%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53%, 30대가 46%로 뒤를 이었다. 40대에서는 38%, 60대 이상에서 34%로 세대별로 우려의 크기가 달랐다.

보상의 기준:
“근태에 따른 분배”라는
한국적 특성 작용,
성과/능력보다 노력
중시 문화

정당한 임금격차 요인: “근무태도” 43% > “능력” 23% > “성과” 22% > 근속 연수 16%

그렇다면 공정한 차등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림4]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임금의 차이를 두어야 할 요인으로서는 “근무태도”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43%가 근무태도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커야 한다”고 답했고, 50%는 “약간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질과 능력”, “업무 성과”, “근속 연수” 등 현재 임금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경우 보수의 차이를 두어야 할 요인이기는 하지만, 격차는 크지 말았으면 하는 여론이 다수다. 자질과 능력, 성과,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야 한다”는 여론은 순서대로 23%, 22%, 16%에 그친 반면,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65~69%로 에 달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성과 보상도 미덥지 못하고,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에도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학력수준”은
임금 차이들 이유
아니다 69%

필요에 따른 분배에는 부정적, “가정 형편”, “부양가족 수” 보수 차등 요인 아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실에서 임금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학력요인에 대해 “임금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9%였다. 대졸 층에서도 65%로 고졸 층의 72%에 비해 낮기는 했지만, 학력수준은 임금 차이를 둘 근거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에서 학력은 업무 능력이나 성취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학력은 부모의 가정 경제적 수준이나, 개인의 노력 이외의 요인들이 낳은 결과물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한편 “필요(need)에 따른 분배관”을 엿볼 수 있는 “부양가족 수”나 “가정형편”을 임금 차등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여론은 소수에 불과하다.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임금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58%였다. 가정형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69%나 되었다.

한국의 야근 문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 문화의 기반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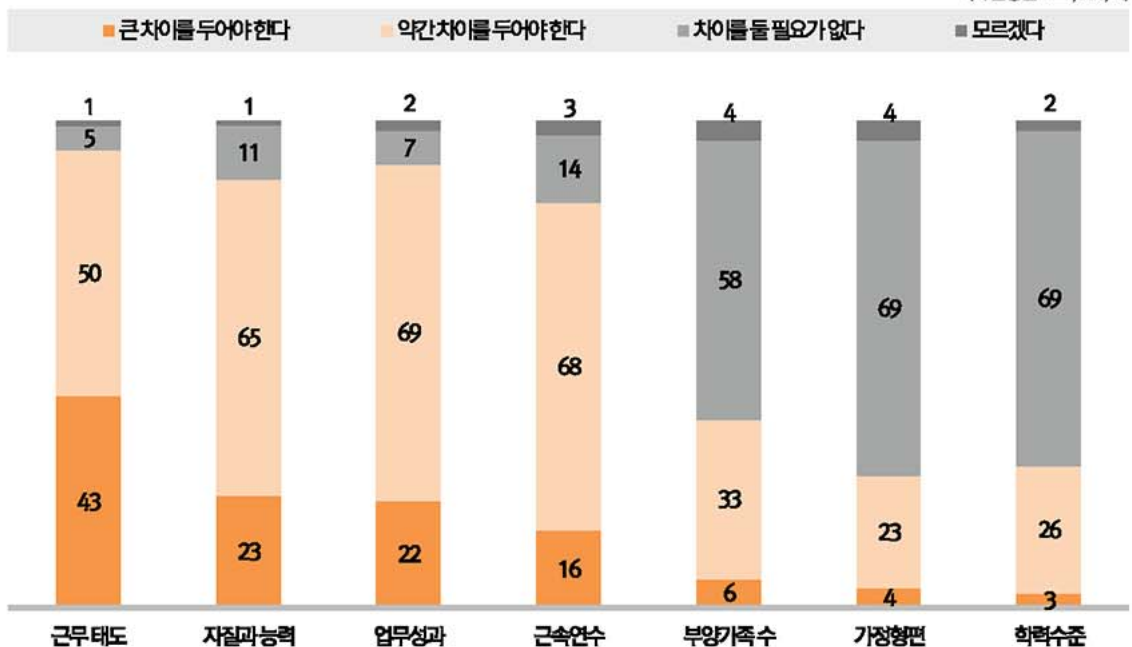
노력에 대한 보상 > 성과에 대한 보상 > 필요에 의한 보상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능력(competence)이나 성과(outcome)에 따른 “업적주의(meritocracy)”보다 노력과 과정에 대한 보상을 공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성보다는 근면성을 기준으로 한 보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부양가족이나 가정형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요구도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필요에 의한 보상을 정의로 보는 시각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결과는 삶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일정한 암시를 준다. 즉 근면성을 공정한 보상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왜 한국인들이 많은 야근을 하는지,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갈등을 대할 때 결과보다 과정, 사연에 더 많은 주목하는지도 납득이 된다. 또한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입장에서 결과를 놓고 임금을 책정하는 연봉급제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지 않으리라는 것, 임시 경쟁에서 성실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 때 왜 크게 좌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 임금 차이를 두어야 할 조건에 대한 생각

(각문항별 N=1,000, %)



02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3) 공익 대 자유

**재산권 제한 가능 40% vs.
재산권 제한 반대 50%,
젊은 세대에서 재산권
제한에 소극적**

한편,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 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우선 입장이 다소 앞서는 가운데 입장이 엇갈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입장(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자유지상주의적 태도(을)에 대해 40%는 갑의 입장을, 51%는 을의 입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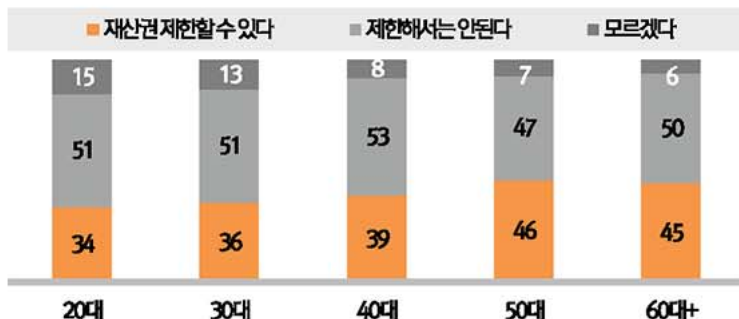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일수록 공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에 긍정적이고, 중도 및 보수층에서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는 태도가 강하다. 하지만 세대별로는 진보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에서 오히려 재산권 제한에 동의하는 공동체주의적 인식이 약하다.²⁾ [그림6]을 보면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20대 34%(매우 5%+대체로 29%), 30대 37%(매우 13%+대체로 24%), 40대 39%(매우 11%+대체로 28%)에 그쳤다. 반면 50대에서는 46%(매우 15%+대체로 31%), 60대 이상 45%(매우 14%+대체로 31%)가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태도가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림5] 공익 위한 재산권 제한 태도



[그림6] 세대별 재산권 제한에 대한 태도

(N=1,000, %)



**정치적으로는
자유보다 질서 선호,
세대 균열 뚜렷**

“정치적 자유보다 질서 유지 우선” 58%, “시민 불편 초래하면 집회시위 허용하지 말아야” 64%

경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산권 우선입장과 공익우선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재산권 보호입장이 다소 앞섰으나 정치적으로는 자유보다 공동체 질서를 우선하는 생각이 컸다. “정부는 정치적 자유보다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58%(매우 21%+대체로 38%)였고, “정치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35%(매우 10%+대체로 24%)에 불과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31%(매우 9%+대체로 22%),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64%(매우 27%+대체로 2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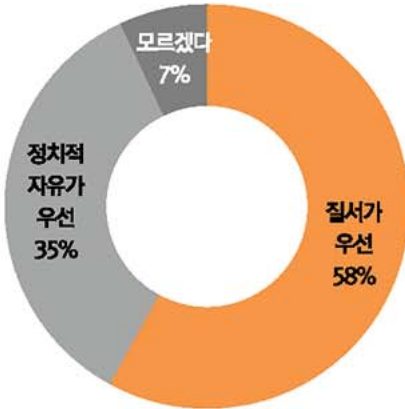
주2) 이번 조사에서 이념적 진보층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 51%,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44%, 보수층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 40%,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54%였다.

진보/젊은 세대는 자유 우선, 중도-보수/ 40대 이상은 질서 우선

주목할 점은 정치적 자유와 질서에 대한 태도에서는 세대별, 이념별로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와 진보층일수록 정치적 자유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고, 고령 세대와 보수층에서 정치적 자유보다 정치적 질서를 앞세우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치적 질서가 우선이라는 갑의 주장에 대해 가깝다는 응답이 고연령 세대 및 보수층으로 갈수록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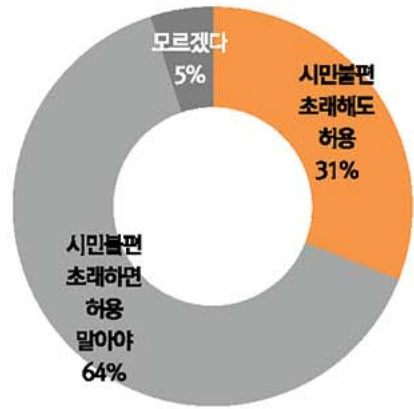
[그림7] 정치적 자유 대 정치적 질서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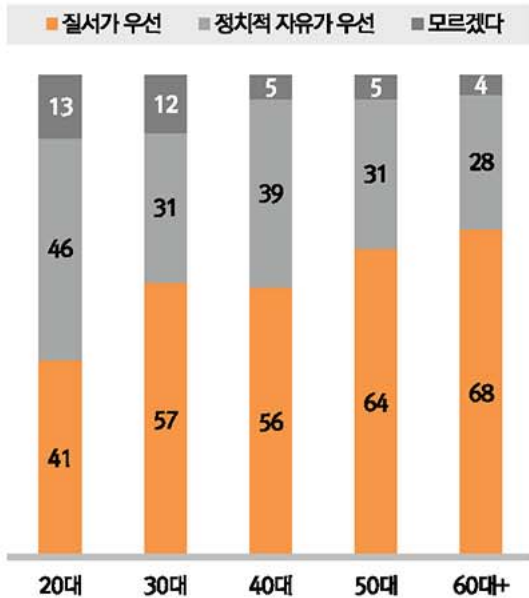
[그림8] 집회시위권리 대 시민편의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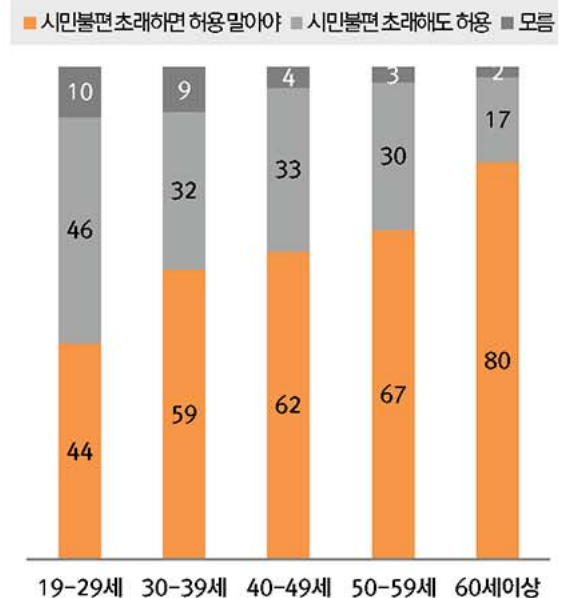
[그림9] 세대별 정치적 자유 대 정치적 질서

(N=1,000, %)



[그림10] 세대별 시민불편 대 집회시위 자유

(N=955, %)



공익과 재산권(자유) 태도의 중요성

성장-복지정책 등에 대한 주요 정책 선호에 영향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정의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입과 분배정책의 방향에 대한 태도를 좌우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인 불개입의 영역으로 보는 자유지상주의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극단적인 냉소로 이어진 반면, 공익과 사회적 수준에서의 공정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이해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의 소유권을 우선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성장정책을 선호한다는 입장이 46%였다.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 성장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비율이 34%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반대로 재산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복지정책 선호비율(52%)이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비율(64%)에 미치지 못한다.

[표2] 공익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태도와 성장 대 복지 정책 선호

(N=1,000, %)

			성장 대 복지			전체
			성장우선	복지우선	모름	
재산권 보호 대 공익목적 제한	재산권 보호 우선	빈도	231	260	13	504
		비율	46%	52%	3%	100%
	재산권 제한 가능	빈도	137	259	9	405
		비율	34%	64%	2%	100%
	모름	빈도	20	42	29	91
		비율	22%	46%	32%	100%
전체		빈도	388	561	51	1000
		비율	39%	56%	5%	100%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03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1)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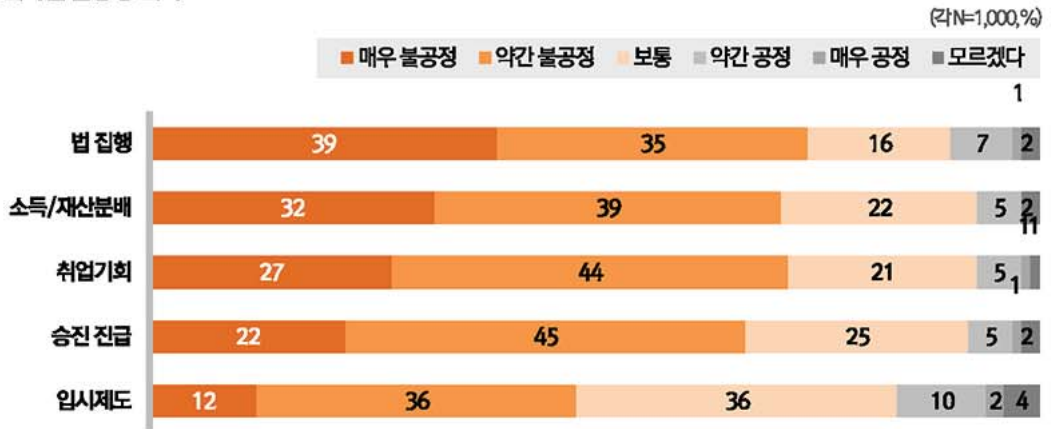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원칙이 한국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 보다 기회의 균등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부터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근대 국가에서 평등의 가장 기본조건이다. 즉, 법 앞의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라면 사회경제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분배적인 불공정보다 법 집행에서의 불공정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은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대단히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임시 제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8%(매우 12%+약간 36%)로 소득과 일자리 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 694명 만 뽑아 자녀 취학단계별 임시제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중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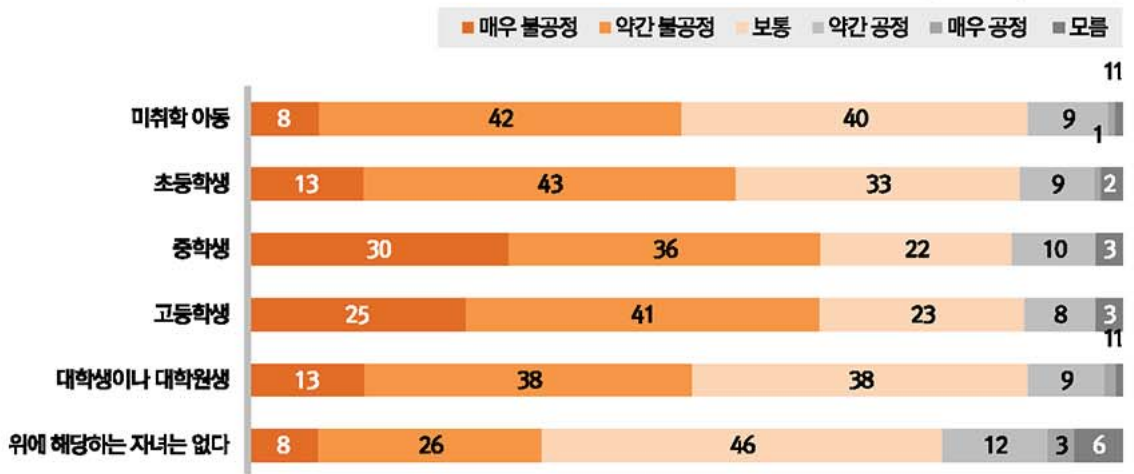
미취학 아동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50%(매우 8%+약간 42%),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의 56%(매우 13%+약간 43%), 중학생 학부모의 66%(매우 30%+약간 36%), 고등학교 학생자녀가 있는 학부모 66%(매우 25%+약간 4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대학/대학원생인 경우(51%), 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34%)에는 임시제도 불신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임시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11] 분야별 불공정 인식



[그림12] 기혼자 중 자녀 취학단계별 입시제도 불공정 인식

(다중응답 N=820, 케이스 기준%)



주3) 다중응답 케이스 기준 미취학아동 132명, 초등학생자녀 119명, 중학생자녀 62명, 고등학생자녀 63명, 대학생/대학원생 자녀 148명, 해당 사항없는 기혼자 296명 총 820 케이스 기준 응답임.

03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2)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

① 불평등이 열패감으로 이어져

저학력, 저소득, 1인 가구 에서 열패감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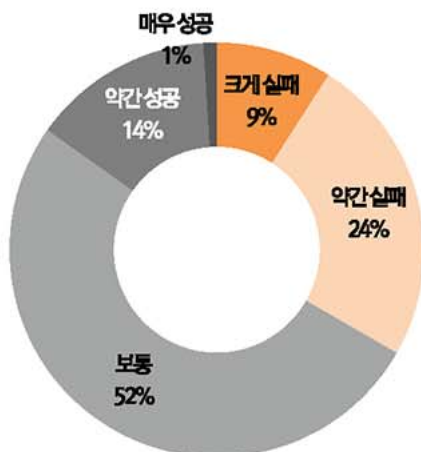
응답자 3분의 1이 열패감, “성공했다” 15%, “보통이다” 51%, “실패했다” 34%

“귀하가 속한 세대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했다”는 응답은 15%(매우 1%+약간 14%),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51%, “실패했다”는 답변도 34%(크게 실패 9%+약간 실패 24%)나 되었다. 이러한 열패감은 역시 저학력층과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 층에서는 자신의 세대 평균 대비 실패했다는 인식이 39%(크게 13%+약간 26%)인데 반해 대재 이상층에서는 29%(크게 6%+약간 23%)로 적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역시 1인 가구 층에서 열패감이 높다는 점이다. 2인 가구 이상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평균 수준과 비슷하지만, 1인 가구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45%수준(매우 12%, 약간 33%)으로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월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 층에서 56%(크게 25%+약간 31%)가 실패했다고 답했고, 200-300만원 대에서도 42%(크게 10%+약간 32%)였다. 이에 반해 월소득 600-700만원 만원 이상 층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23%(크게 5%+약간 18%),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13%(크게 1%+약간 12%) 수준에 불과하다.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응답도 40%(매우 2%+약간 38%)로 높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비례함을 보여준다.

[그림13] 동 세대 대비 본인 성공여부

(N=1,000, %)



[표3] 학력, 소득, 가구규모 별 본인 성공여부 평가

(N=1,000, %)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실패	약간 실패	보통	약간 성공	매우 성공	계
학력							
고졸 이하	(527)	13	26	49	11	1	100
대재 이상	(473)	6	23	53	18	1	100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168)	25	31	37	7	0	100
200-300만원	(216)	10	32	51	6	0	100
300-400만원	(184)	7	27	53	14	1	100
400-500만원	(168)	5	21	60	13	1	100
500-600만원	(99)	5	16	58	17	3	100
600-700만원	(61)	5	18	52	25	0	100
700만원이상	(104)	1	12	48	38	2	100
가구원수							
1명	(97)	12	33	41	11	2	100
2명	(241)	11	22	54	12	1	100
3명	(266)	11	23	49	16	1	100
4명이상	(395)	7	24	53	16	0	100

② 한국의 성공공식: 부모 배경과 연줄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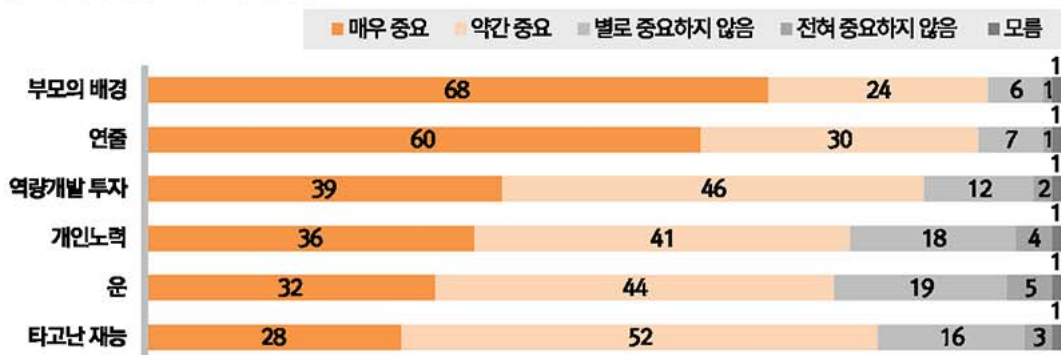
**부모 배경 68%,
연줄 60%, 역량투자 39%,
개인의 노력 36%,
운 32%, 재능 28%**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같은 요인이 아니라 부모 배경이나 연줄 같은 노력과 실력 외적인 요소의 결과라는 불신이다.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한 비율 기준으로 보면 부모 배경이 68%, 연줄 60%로 압도적이었다.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이 역시 가정 배경이 일정하게 반영) 39%,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응답은 36%였고 운 32%, 타고난 재능 28% 순이었다(그림14).⁴⁾

성공조건을 부모의 배경 같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는가, 자신의 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자력 요인으로 보는가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5]에서 부모 배경이 성공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는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6%인데 반해 약간 중요하다고 답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62%로 그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그림16]을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8%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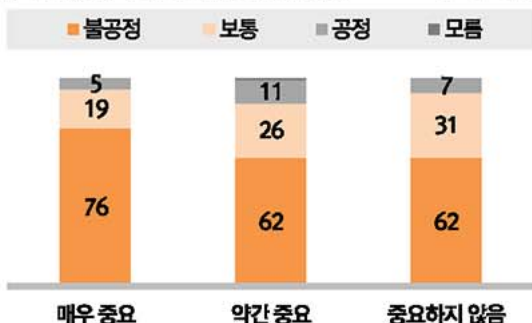
[그림14]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조건

(단N=1,000,%)



[그림15] 부모 배경*취업기회 공정성

(N=1,000,%)



[그림16] 개인 노력*취업기회 공정성

(N=1,000,%)



주4) 약간중요하다는 응답까지 합한중요성 평가는 부모 배경 92%, 연줄 90%, 역량개발 투자85%, 타고난 재능 80%, 개인노력 77%, 운 76% 순이었다.

③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에 대한 이중잣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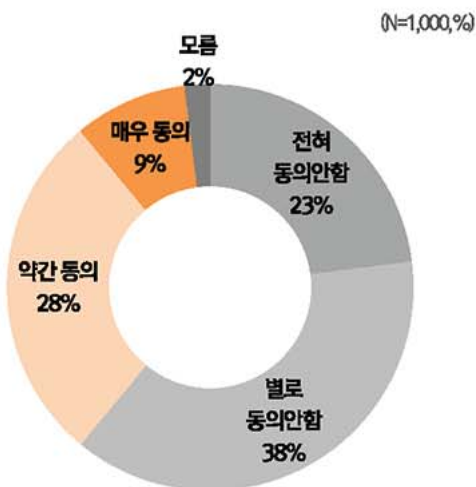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부동산소득 “부당하다”
정규직 경쟁에는 20대,
부동산투자에는 50대가
비판여론 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력차이 아니다 62%,
부동산 가격 상승, 정당한 투자의 결과 아니다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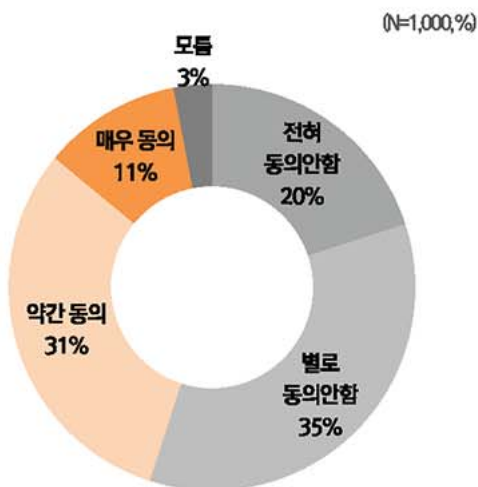
한국인의 다수는 경쟁을 통해 노력(근무 태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취업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크다. 일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62%(전혀 동의 안함 23%+별로 동의하지 않음 39%)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개인의 실력과 태도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은 정당한 투자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5%(전혀 동의 안함 20%+별로 동의하지 않음 35%)가 부정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이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20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52%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50대에서 정당한 투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7]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 때문이다”



[그림18] 부동산 가격 상승
“정당한 투자의 결과이다”



03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3) 계층상승의 기회에 대한 냉소 확산

불공정한 경쟁,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 계층상승 기회 열려 있다”는 주장에 73%가 동의 안 해,
20대에서는 80%가 냉소적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닫혀가고 있다는 인식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3%(전혀 동의하지 않음 33% + 별로 동의 안함 40%)로 압도적이다. 계층상승 기회가 열려있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 비율은 세대로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 80%, 30대 74%, 40대 75%, 50대에서 73%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66%로 온도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이라는 사회적 이동 기회가 닫혀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연줄과 같은 요인이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인식될수록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부모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82%가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의 기회에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약간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59%,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45%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연줄을 중요한 변수로 볼수록 계층상승에 냉소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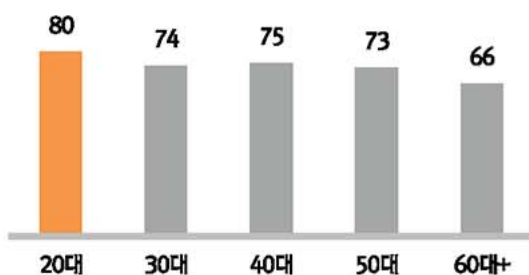
[그림19] “계층상승 기회 열려있다” 태도

(N=1,000, %)



[그림20] 세대별 계층상승 기회에 대한 반감

(N=1,000, %)



[그림21] 부모 배경 중요성과 계층상승 인식

(N=1,000, %)

■ 계층상승 비동의 ■ 계층상승 동의 ■ 모름



[그림22] 연줄 중요성과 계층상승 인식

(N=1,000, %)

■ 계층상승 비동의 ■ 계층상승 동의 ■ 모름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4

여론으로 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04

여론으로 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1)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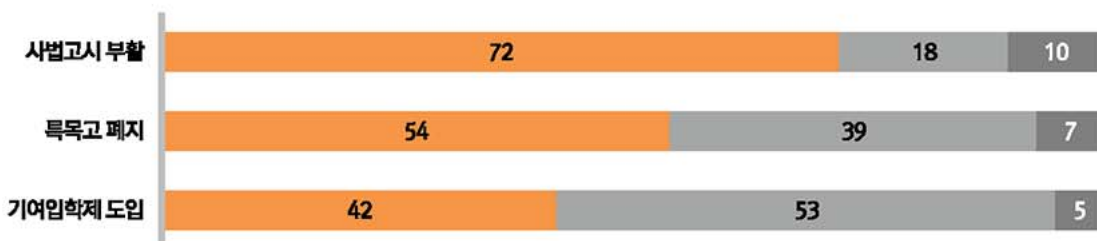
“사법고시 부활” 72%,
“특목고 폐지” 54%,
“기여입학제 도입” 42%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논란이 되어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반대한다는 입장이 53%로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약간 앞섰다.

[그림23] 각종 경쟁 제도에 대한 태도

(각N=1,000,%)

■ 찬성 ■ 반대 ■ 모름



① 사시는 공정경쟁의 상징: 차등분배 선호할수록 사시 부활 지지

경쟁에 비판적이며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진보진영에서 기존 사법고시제도 폐지에 적극적이었고 반대로 경쟁의 효율성과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을 강조해온 보수진영에서는 사법고시제도를 기회형평의 제도로서 옹호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림24]를 보면 보수층에서 사시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79%),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69%). 그러나 [그림25]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321명 중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작을수록 좋다”고 답한 평등분배 선호층(89명)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고 답한 차등분배 선호층(219명)과 사이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뚜렷하다. 평등분배 선호층에서는 사법고시 부활에 찬성하는 비율이 60%, 사시부활에 반대하는 비율이 32%였지만, 차등분배 선호층에서는 사시부활 찬성이 74%로 높아지고, 사시부활 반대 입장이 16%로 떨어진다. 한편,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각각 분배관의 차이에 따른 사시제도에 대한 태도 차이가 없었다.

② 불공정 입시 불만, 특목고에 대한 반대여론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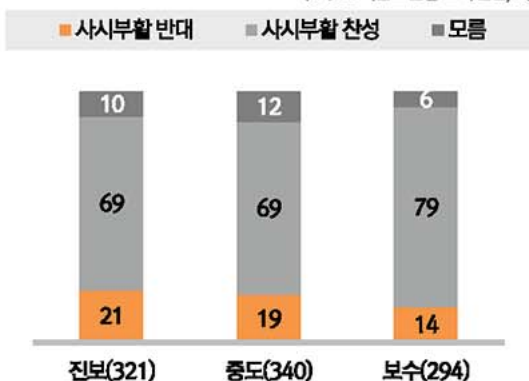
반면 외고, 과학고로 대표되는 특수목적고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을 갖춘 학생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 선발 시 음성적인 특혜 및 유명대 진학율이 집중되면서 계층간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제도로 이해되어 왔다. 특목고 학생들의 가정소득과 학부모의 자산 등과 특목고 진학 및 유명대학 진학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발표들이 계속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26]을 보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별로 특목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입시제도가 공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43%, 보통이라는 중립층에서는 51%였지만, 불공정하다는 응답층에서는 59%로 높아진다.

③ 기여입학제도 불공정, 반대 다수

[그림27]을 보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된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비율은 현재의 입시제도를 공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48%, 중립층에서 52% 수준이지만, 불공정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58%나 된다. 특수목적고 및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가 현행 입시제도를 불공정인식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결국 특목고 및 기여입학제가 입시기회의 불공정성을 유발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사시제도의 경우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층에서는 물론 평등분배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지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을 정도로 공정한 경쟁제도로 인식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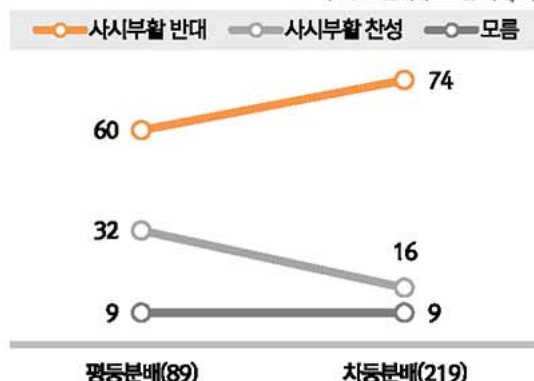
[그림24] 이념성향별 사법고시 태도

(N=966 이념·모름층 표기인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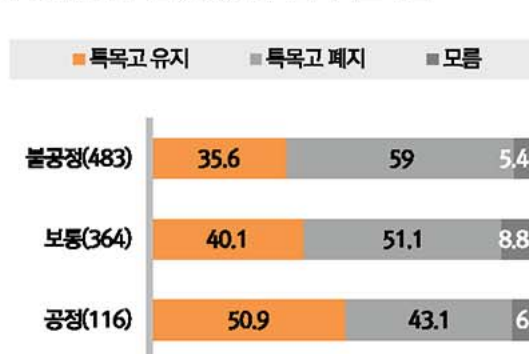


[그림25] 진보층의 분배관에 따른 사법고시 태도

(N=308 분배태도 모름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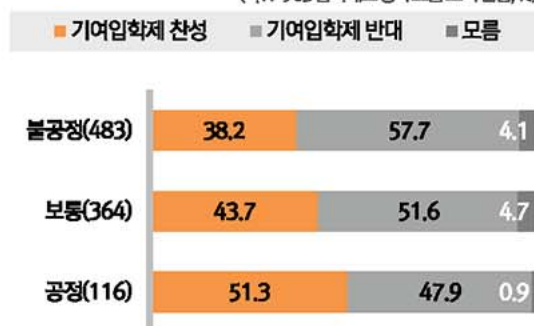


[그림26] 입시제도 공정성 평가와 특목고 태도



[그림27] 입시제도 공정성 평가와 기여입학제 태도

(각 N=963 입시제도 평가·모름 표기인함, %)



04

여론으로 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2) 공정한 의무의 배분: 불공정한 징병제 개선

**이익 배분은
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
의무의 배분은
평등 분배 선호**

앞에서 재산과 공직의 배분에서 기회의 공정성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 절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중심으로 책임과 의무의 배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재산과 공직의 분배 문제에서는 다수가 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선호하지만, 병역과 같은 책임과 의무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 배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엘리트 층에서의 병역 비리나 병역 의무의 방기가 시민들의 분노와 여론의 역풍을 유발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병역관련 쟁점을 군가산점 제도, 대체 복무제, 모병제 도입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대체 복무제 도입 찬성 41% 대 반대 52%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2%,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41%를 능가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차이에 따라 병역의 의무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공익요원이나 과거 방위제도가 현역 복무에 결격 사유가 뚜렷할 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으로 간주되어 온 조건에서 대체복무제도 유사하게 현역 입영에 대비하여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즉 병역의 책임은 차등적인 분배가 아닌 절대적으로 동등한 배분을 선호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남성(37%)에 비해 여성(46%)이, 60대(30%)에 비해 3040대(47%)에서, 보수층(29%)에 비해 진보층(53%)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② 모병제 도입 도입해야 56%, 동의하지 않는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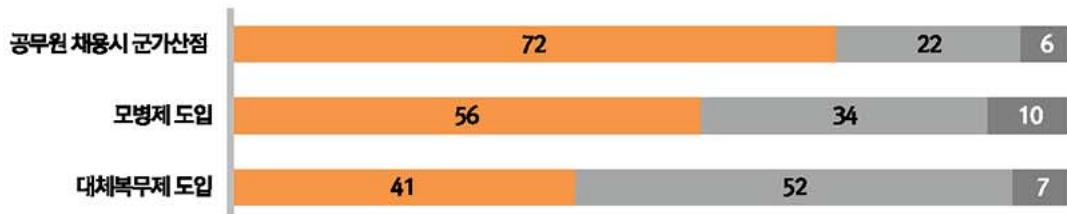
징병제 하에서 현역 복무와 차별되는 대체복무제에는 반대하지만, 장기적으로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다. “향후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56%, 모병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24%에 그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징병제 대상이 아닌 여성층에서, 안보관념이 강한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모병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징병대상인 남성층과 젊은 세대와 이념적인 진보층에서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계약의 영역으로 병역의 선택과 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계약 으로서의 모병제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③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 찬성 72%

당장 대체복무제는 도입 전이고, 모병제 찬성은 높지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우선, 징병제를 전제로 군복무 의무에 따른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시 군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군 가산점제도 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2%가 찬성하는 것은 현재 남자들만 징병 대상인 조건을 감안하여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셈이다.

[그림28] 병역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

(각N=1,000,%)

■ 동의 ■ 동의 안함 ■ 모름


[표4] 사회경제적 지위 별 병역제도에 대한 태도

	사례수 (명)	대체복무제(100%)			모병제 도입(100%)			공무원/공기업 채용시 군가산점(100%)			
		도입 찬성	도입 반대	모름	도입 찬성	도입 반대	모름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41	52	7	56	34	10	72	22	6	
성별											
	남자	(175)	37	60	3	60	35	5	83	14	4
	여자	(173)	46	44	11	52	33	15	62	31	8
연령											
	19-29세	(175)	43	42	15	57	30	14	65	24	11
	30-39세	(173)	47	47	6	61	28	12	72	20	8
	40-49세	(203)	47	49	5	63	27	10	69	25	6
	50-59세	(201)	44	50	6	57	33	10	77	19	4
	60세이상	(248)	30	65	4	47	48	5	76	22	2
거주지역											
	서울	(195)	41	52	7	56	34	10	69	24	7
	경기/인천	(300)	45	47	8	60	32	9	69	26	6
	대전/충청	(105)	37	56	7	61	35	4	76	22	2
	광주/전라	(102)	37	57	6	63	27	10	79	18	3
	대구/경북	(102)	43	52	5	50	41	8	80	15	5
	부산/울산/경남	(155)	40	55	5	50	36	14	72	20	8
	강원/제주	(41)	38	52	10	46	36	18	69	26	5
이념성향											
	진보(0-4)	(321)	53	42	5	68	24	8	72	23	5
	중도(5)	(340)	43	49	9	54	35	11	71	23	6
	보수(6-10)	(294)	29	68	3	48	46	6	77	19	3

04

여론으로 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3) 취약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딜레마

① 조건의 평등 위한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한지지

**저소득층 대학입학
할당제 54% 찬성,
취업 시 취약계층
선발 우선권 과반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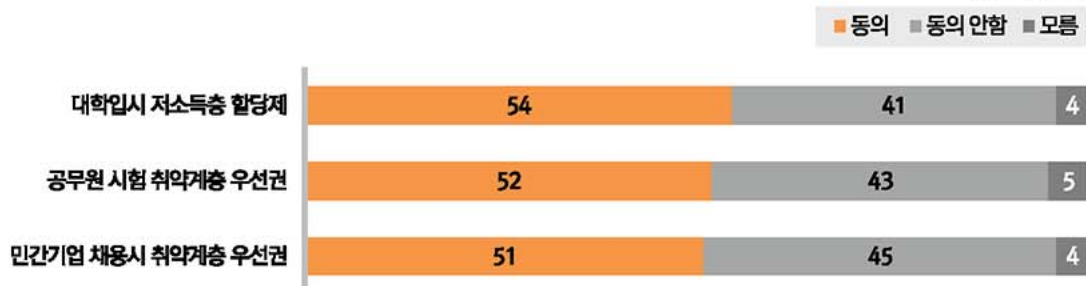
취약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서구에서 차별 받는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계층의 경우 이들에게 가산점이나 할당제 등을 활용하여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어주려는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형식적인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약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다. 이와 함께 다양성이 보장된 조직, 집단의 역량과 응집성을 시킨다는 실용적 시각도 고려된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인종이나 계층 차원 보다는 여성, 지방 인력에게 고용 할당을 정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취약계층 우대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대학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제, 농어촌 특별전형, 국가유공자 전형, 재외국민 전형, 다자녀 전형, 새터민 전형, 실업제고 전형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해 남성은 물론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거주 학생들은 역차별이라며 철회하라는 주장이 최근에도 청와대 인터넷 청원게시판이나 “광화문 1번지” 정책 제안 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⁵⁾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대학입시에서 저소득층 출신을 일정비율로 뽑는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4%가 동의하고 4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취업기회에 있어서도 “공무원 시험 시 두 사람이 동점이라면 보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2%가 동의했고, “민간기업 취업 시험”에 대해서도 51%가 동점자 중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우대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림29] 대학입시 및 민관 채용 시 취약계층 우대제도에 대한 태도

(단위: N=1,000, %)



주5) 고용노동부 “지난 10년간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고용비율 7.03%p, 관리자비율 10.17%p 증가” (2017/09/28);

“지방대 우대정책의 모순과 역차별을 해결해주세요”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정책제안 홈페이지

(https://www.gwanghwamoon1st.go.kr/policy/suggestion/view.php?p_idx=173288&seq=162488&p_cate1=P3&page=2575, 검색일 2018/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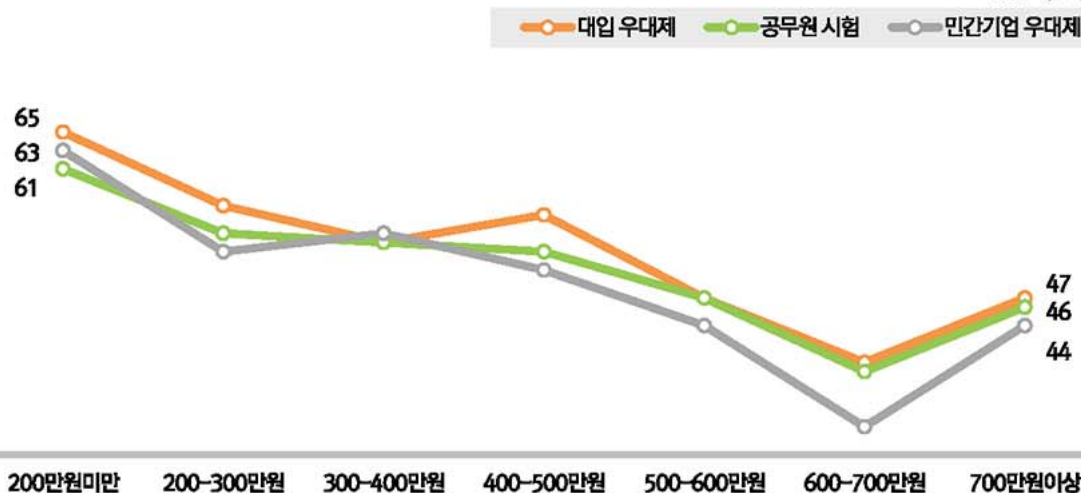
② 우대제를 둘러싼 갈등: 조건의 평등인가? 역차별인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찬성, 월 200만원 미만에서 60% 이상 동의, 700만원 이상에서 45% 내외 그쳐
비교우위 집단은 반대,

입시와 취업 시 취업계층에 대한 우대제에 대해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입장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층에서는 각 우대제도에 대한 동의 비율이 61~65% 수준인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대제에 대한 동의 비율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대략 월소득 600~700만원 이상 수준의 고소득층에서 우대제에 대한 동의비율은 과반에 못 미치는 44~46%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30] 가구소득별 우대제에 대한 동의 비율

(단위: 1,000명,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층,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이 우대제의 최대 지지기반

[표4]를 보면 학력별로는 입시 및 취업경쟁의 취약계층인 고졸 이하층에서 해당 우대제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층에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경쟁의 강도가 강하고, 현재 취업경쟁 중인 대학재학생이나 대졸층에서는 입시 할당제에 대해서만 50% 지지를 갓 넘겼을 뿐 공무원 취업 우선권에 45%, 민간기업 취업 우선권에 44%만이 동의를 표명했다. 이념적으로는 평등지향이 강한 진보층에서 조건의 평등을 강화하는 취약계층 우대정책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중도층이 입시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취업기회 우대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6) 이러한 차이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으로 확인해본 결과 대학입시 우대제와 민간기업 채용시 취약계층 우선선발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90%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시험에서의 우선선발권에 대한 성별 차이가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성이남성에 비해 우대제 거부감 강해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해 세대와 계층별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우선 주목할 대목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할당제에 대해 여성 44%가 비판적인데 비해 남성은 38%였다. 취업 시 공무원 시험과 민간 기업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선발권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성이 각각 6%p(공무원 시험 우대제 반대: 여성 46%, 남성 40%), 7%p(민간기업 우대제 반대: 여성 48%, 남성 41%)가 높았다.⁶⁾

그 동안 한국에서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분류되어 여성고용 할당제 등 정책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에게서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면 왜 그럴까? 최근 각종 취업 및 대학입시에서 여성이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할당제나 다른 우대제가 여성에게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대로 취약계층 우대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일수도 있다. 아니면 제3의 요인이 있는 지 심도 깊게 관찰 및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우대제 60대만 48%지지, 20~50세대 54~58%동의

취업 우대제 2030세대 거부감, 5060세대 과반찬성

취업 시험(공무원+민간기업) 우대제는 2030세대지지 42~46%,
5060세대 56~61% 찬성

세대별로 보면 대학입시의 저소득층 할당제에 대해서는 6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56%, 30대의 54%, 40대의 58%, 50대의 57%가 동의한 반면 60대에서는 48%에 그쳤다. 그러나 취업기획과 관련해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공무원 시험과 민간기업 채용기회에서 동점자에 한해 취약계층 출신자를 우선 선발하는 우대제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에서는 모두 찬성이 61%였고, 50대의 경우 공무원 시험 우대제에는 59%, 민간기업 취업 우대제에는 56%가 찬성했다. 취업경쟁의 당사자들인 2030세대에서는 반대로 우대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공무원 시험 우대제에 대해 47%가, 민간기업채용 우대제에 대해서는 5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대에서도 공무원 시험 우대제와 민간채용 우대제에 대해 공히 51%가 거부감을 표했다. 40대에서는 공무원 시험과 민간 채용 우대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2030세대의 경우 입시경쟁에서는 벗어났지만, 취업의 경우 당사자 집단이다. 이들 2030세대에서 입시 우대제에는 찬성이, 취업 우대제에는 반대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주7) 실제로 2009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넘어섰으며,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을 보면 여여전히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남성의 취업률은 하락 중인 반면, 여성 취업률은 상승하여 그 격차는 줄고 있다 (한국사회동향 2017, 117-118).

서울 거주자도 우대제 비토

대학입시(46%), 공무원 시험(51%), 민간채용(55%)시 취약계층 우대제 반대 높아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들이 우대제에 대한 비토여론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우대제에 대한 지지는 대학입시에서의 저소득층 할당제에 대해서는 호남이 가장 높았고, 취업시험(공무원, 민간) 우선선발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PK와 충청권 거주자의 지지가 강했고, 민간기업 채용 시 취약계층 우선선발권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높았다. 경인 지역은 고르게 53~54%의 우대제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서울에 비해 교육 및 취업기회가 크게 부족하다는 인식이 경기도 지역에서의 고른 우대제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5] 우대제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지 및 비토 기반

	사례수 (명)	대학입시 저소득층 할당제 (100%)			공무원 시험 취약계층 우선 선발권 (100%)			민간기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권 (100%)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54	41	4	52	43	5	51	45	4	
성별											
	남자 (175)	58	38	4	55	40	5	54	41	4	
	여자 (173)	51	44	5	49	46	5	48	48	5	
연령											
	19~29세 (175)	56	35	9	46	47	7	43	50	7	
	30~39세 (173)	54	39	7	42	51	8	42	51	7	
	40~49세 (203)	58	39	3	50	46	4	47	49	4	
	50~59세 (201)	57	39	4	59	38	3	56	41	3	
	60세이상 (248)	48	50	1	61	37	3	61	36	3	
거주지역											
	서울 (195)	48	46	6	43	51	6	38	55	6	
	경기/인천 (300)	53	42	4	54	42	4	53	44	4	
	대전/충청 (105)	56	41	3	58	40	2	51	48	1	
	광주/전라 (102)	65	30	6	54	40	5	51	43	5	
	대구/경북 (102)	57	40	3	51	44	5	61	35	4	
	부산/울산/경남 (155)	55	41	4	59	34	7	59	34	7	
	강원/제주 (41)	49	48	3	41	59	0	41	59	0	
학력											
	고졸이하 (446)	59	37	4	59	36	5	58	36	6	
	대재/대졸 (498)	50	45	5	45	49	6	44	52	4	
	대학원이상 (56)	53	45	2	54	46	0	57	43	0	
이념성향											
	진보(0~4) (321)	55	40	5	58	37	5	54	41	4	
	중도(5) (340)	56	40	4	47	48	4	47	49	4	
	보수(6~10) (294)	51	46	3	52	45	4	54	44	3	

③ 지방대 할당제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우세

“지역균형에 기여” 69%,
“국가발전에 기여” 62%,
“사회정의에 기여”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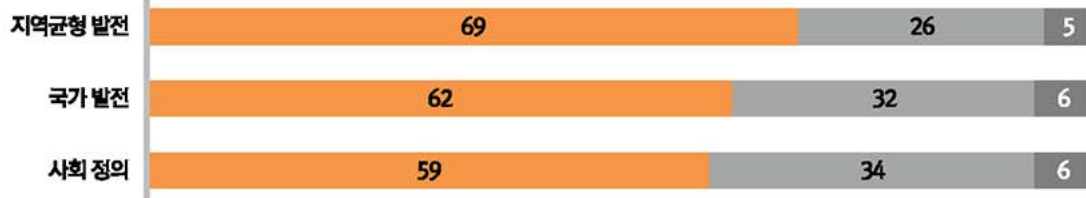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대 할당제에 대해서도 객면적인 평가는 훨씬 긍정적이다. “취업시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할당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69%,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62%가 동의한 반면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5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이나 공정성 차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감대가 약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6]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취약계층 우대제와 달리 성별, 학력별, 소득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세대 및 지역별로는 취약계층 우대제와 유사하게 지방대학 할당제에 대한 태도에 편차가 뚜렷하다. 젊은 세대와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대 우대제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고령세대와 수도권에서 먼 지역들에서 우대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림31]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 할당제에 대한 평가

(단위:1,000명, %)

■ 동의 ■ 동의안함 ■ 모름



[표6] 우대제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지 및 비트 기반

	사례수 (명)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100%)			국가 발전에 기여 (100%)			사회정의에 기여 (100%)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69	26	5	62	32	6	59	34	6	
연령											
	19-29세	(175)	64	29	8	51	39	10	53	37	9
	30-39세	(173)	67	27	6	57	34	9	52	38	10
	40-49세	(203)	72	22	6	65	29	6	60	33	7
	50-59세	(201)	71	27	2	67	29	4	65	32	3
	60세이상	(248)	72	24	4	66	30	5	63	33	4
거주지역											
	서울	(195)	65	32	4	58	35	7	53	40	6
	경기/인천	(300)	66	28	6	59	35	7	53	40	7
	대전/충청	(105)	69	24	7	63	29	8	63	30	7
	광주/전라	(102)	75	24	1	65	32	3	70	27	3
	대구/경북	(102)	75	20	5	68	27	5	71	23	6
	부산/울산/경남	(155)	72	20	8	64	27	9	59	32	10
	강원제주	(41)	77	23	0	69	28	3	64	36	0

④ 내가 인사권자라면, 지방대 우대제 적용에 딜레마

**귀하가 인사권자라면
동점자 중
지방대 출신 뽑을까,
서울지역대학 출신 뽑을까**

본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우대제 등 당위적 응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제 본인이 인사권자라면 지방대 우대제를 실제로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공무원 채용 시험과 민간기업 채용 최종 인사권자라는 가정 하에 동일한 성적을 거둔 2명의 후보 중 지방대학 출신자와 서울지역 대학 출신자 중 어느 쪽을 선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확인해보자.

공무원 채용 시 “잘 모름” 45% > “지방대 출신” 33% > “서울지역대학 출신” 23%
민간기업 채용 시 “잘 모름” 41% > “지방대 출신” 33% > “서울지역대학 출신”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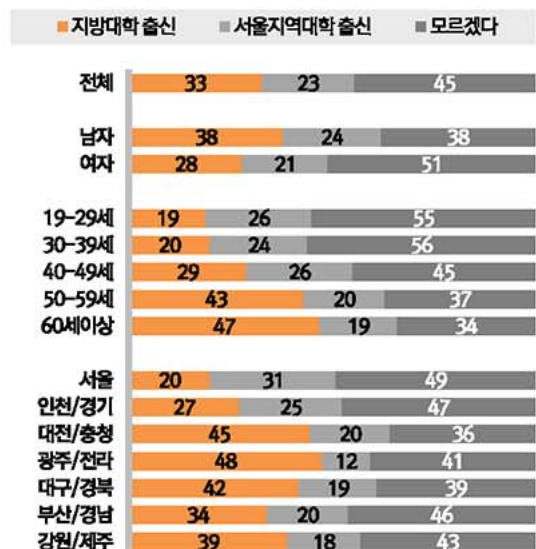
**열 명 중 네 명
“잘 모르겠다”
여성, 2030, 수도권에서
유보적 응답 높아**

취업 시 지방대학 우대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누굴 뽑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공무원 채용 시 45%, 민간기업 채용 시 41%로 가장 많았다.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지방대 출신을 뽑겠다는 응답이 공히 33%였고, “서울지역 대학 출신을 뽑겠다”는 응답은 공무원 채용 시험을 가정할 경우 23%, 민간기업 채용 시험을 가정할 경우 26%로 지방대 출신을 뽑겠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하기는 했다. 지방대 채용 우대제에 대해 표면적으로 우대제를 적용해도 막상 스스로 실천하는데 딜레마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 2030세대, 수도권 거주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우대제에 상대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여성에서 51%였던 반면, 남성 중에서는 38%에 그쳤다. 한편 2030세대에서는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각각 55%, 56%였고, 40대에서 45%, 50대에서 37%, 60대 이상에서는 34% 수준에 불과했다. 거주지역별로 봐도 서울과 경인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유보적인 응답이 각각 49%, 47%였다. 민간기업 채용 시험을 가정했을 때도 거의 동일한 응답 패턴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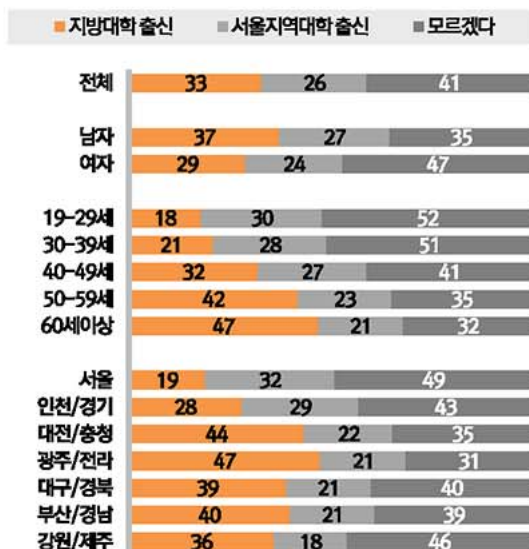
[그림32] 귀하가 공무원 시험 인사권자라면...

(각N=1,000, %)



[그림33] 귀하가 민간기업 인사권자라면...

(각N=1,000, %)



04

여론으로 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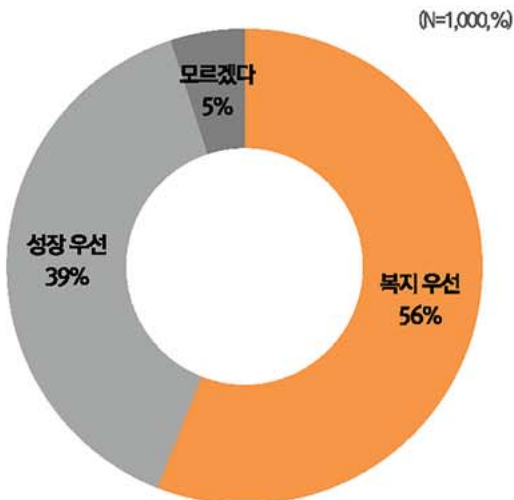
4) 재분배와 복지정책의 강화

복지정책 확대, 고소득층 증세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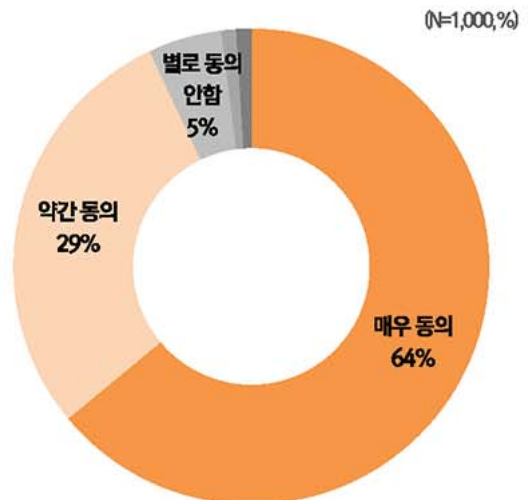
불공정 경쟁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은 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성장을 복지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답한 응답 39%보다 많다. 또한 “고소득층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93%(매우 64%+약간 29%)로 압도적이다.

사회적 성공이 부의 대물림, 연줄과 같은 비성취적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소득 중대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에 기인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전 계층, 전 세대에 고르게 지지를 받는 반면,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는 세대별, 이념별로 인식차이가 심하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20대에서 74%, 30대에서 68%, 40대에서 58%였지만, 50대에서는 46%, 60대 이상에서는 41%로 낮다. 이념적으로도 주관적 진보층에서는 72%, 중도층에서는 51%, 보수층에서는 44%로 나타나 이념적 균열 양상이 뚜렷하다.

[그림34] 성장 대 복지



[그림35]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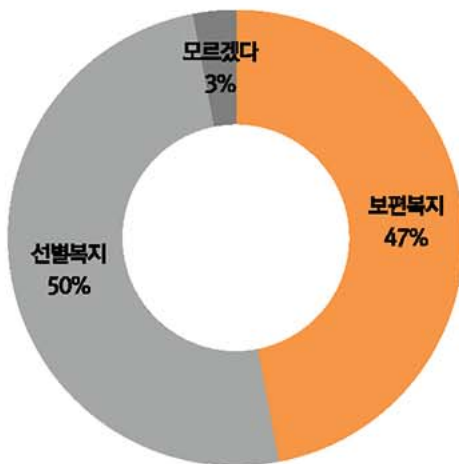


복지정책의 방향, 선별복지와 보편 복지론 팽팽

복지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지만,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강조해온 보편복지 못지 않게 선별복지에 대한 지지도 팽팽하다. 선별복지 의견에 가깝다는 응답이 50%(매우 18%+대체로 32%)인 반면, 보편 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7%(매우 18%+대체로 28%)였다. 특히 성장과 복지 중 복지를 우선 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2030세대에서도 보편복지에 가깝다는 여론은 51%, 56%이었고, 40대에서도 51% 수준에 그쳤다. 주관적 이념층에서도 진보층에서는 53%, 중도층에서는 47%, 보수층에서 38%로 나타나 복지 우선 여론에 비해 보편복지론에 대한 지지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보다 공정한 차등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정의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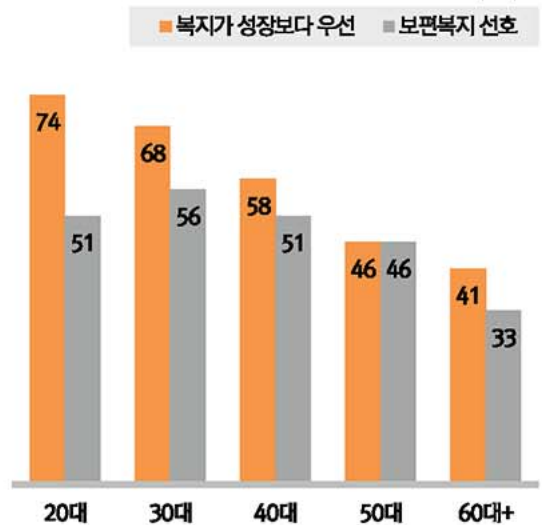
[그림36]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N=1,000, %)



[그림37] 세대별 복지우선/보편복지 지지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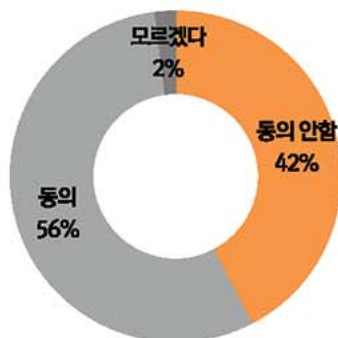


“우리나라 복지제도 잘 갖추어져 있다” 55%, 세대별 평가는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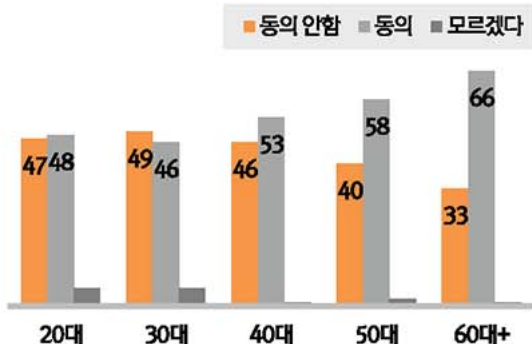
복지 및 분배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가 불공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였다. 동시에 세대별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엇갈린다. 긍정적인 평가가 20대에서 48%, 30대에서는 46%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40대 53%, 50대 58%, 60대 이상 66%나 긍정적인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 신뢰가 할수록 불공정 인식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그림40, 41).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답한 긍정층(424명)에서는 취업 기회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6%에 그쳤지만,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복지제도 불신층(551명)에서는 79%나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임시제도에 대해서도 복지제도 긍정층에서는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복지제도 불신층에서는 54%로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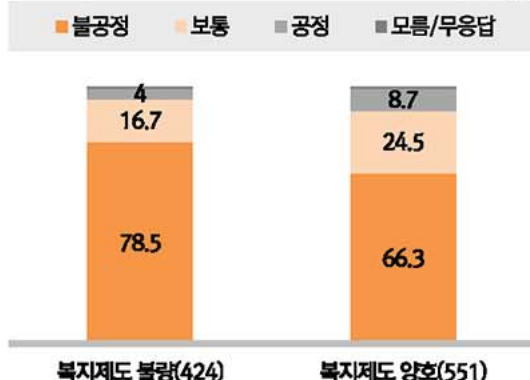
[그림38] “한국, 복지제도 잘 갖추어져 있다”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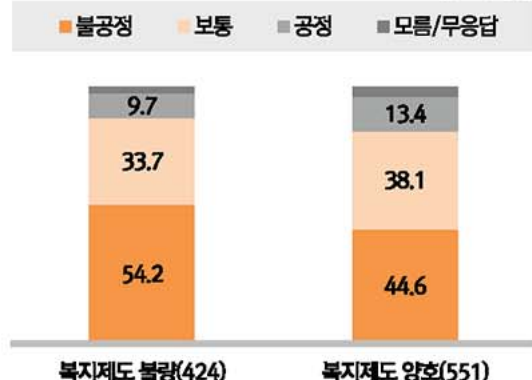
[그림39] 세대별 한국 복지제도 인식 (각N=1,000,%)



[그림40] 복지제도 인식별 취업기회 태도 (N=975,%)



[그림41] 복지제도 인식별 임시제도 태도 (각N=975,%)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5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05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지도도를 그려보는 중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산술적 평등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로 다수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배정의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주의적 정의관보다는 자유주의적 평등정의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배와 보상의 기준으로서 전통적으로 좌파는 필요(needs)에 따른 평등 분배를 선호하고, 우파가 성과(performance) 혹은 능력(merit)에 비례한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한국에서는 “근무태도”와 같은 “노력에 비례한 보상”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상의 자격이나 결과상의 업적을 따지기보다 과정상의 노력을 중시하는 셈이다. 둘째, 차등분배에 대한 선호는 경쟁의 효율적 배분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경쟁의 장점만을 긍정하기보다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을 함께 보고 있는 셈이다. 셋째, 공익과 자유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는 공익을 명분으로 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반면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질서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태도는 한국에서 왜 복지정책 수요가 크지만 동시에 보편복지나 기본소득제 같은 정책보다 선별복지나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 장려 세제(ETC)’에 대한 선호가 큰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기업이나 조직에서 야근 문화가 쉽게 사라지기 힘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한편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실태를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쟁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공정한 차등 분배는 텅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입시나 취업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자산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불신이 크다. 무엇보다 사회적 성공이 개인의 성취와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이나 연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상승의 기회는 닫혀 가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심화되고 응답자의 3분의 1은 자신이 본인을 평균적인 삶에 비해 실패했다고 보는 열패감을 피력하고 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의 성공을 자수성가로 보지만, 열패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사람은 배경과 연줄로 이룬 행운아에 불과한 셈이다. 사회에 만연한 이중 잣대는 신뢰자본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제도적 대안과 관련하여 우선 개인의 노력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경쟁 제도를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를 부활시키라는 요구가 72%, 특목고는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54%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배경과 능력이 작동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다수였다. 이익의 배분에서는 차등분배를 선호하지만 병역의무와 같은 책임의 영역에서는 일률적인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체복무제에 반대가 강하고, 병역복무자에 대한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향후 모병제 도입에 찬성이 56%가 찬성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 하에 놓인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건의 평등”을 위한 각종 우대제(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다수다. 특히 저소득층, 고연령층, 비 수도권 거주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쟁의 당사자 집단(2030세대)이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집단(주로 서울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강하다. 또한 본인이 인사권자라고 가정하면 이를 적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나타나 우대제 실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딜레마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한 분배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고소득층 중세에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성장보다 분배정책을 우선하라는 여론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자구노력이나 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복지에 대한 견제 심리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경쟁을 통한 공정한 차등, 노력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작동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2000년 대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본 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의관에 대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에는 연구와 분석, 자료의 한계가 명백하다. 본 조사가 정의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는 촉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담당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